

2026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 김 건 위



I. 들어가며

-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넘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선거였음
 - 양극화·저성장 등 다중·복합 위기 속에서 지역 성장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방의회 구성이 요청됨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이른바 '5극3특' 구성을 위한 통합특별시 논의가 진전되어, 지방자치 생태계 전반의 변화가 예고됨
-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 출범 논의와 맞물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요구도 커지는 상황임
- 그러나 지방의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선거 이후 출범하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됨
- 이에 본고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의정활동 30년 성과분석을 토대로, 선거 이후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야 할 실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본 지방의회의 현실

■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및 효능감의 한계

- 민선 지방자치 30년 동안 조례 발의 등 의정활동의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질적 성과에 대한 주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임
-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 제도 전반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지방의원과의 접촉 빈도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나아가 존재 이유에 대한 주민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됨

| <표 1> 지방의회 성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주요 원인 |

순위	부정적 인식 사유	응답 비율(%)
1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낮음	36.7
2	지방의회 자체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	33.5
3	지방행정 대부분을 집행기관이 수행하고 있음	13.1

*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5).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대국민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 주민이 요구하는 지방의회 개선 방향

- 주민들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확대’(37.9%)와 ‘윤리성·책임성 강화’(36.0%)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음
- 또한 정당 공천제 및 선거구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타나, 지방의회 제도 개혁 논의 역시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표 2> 지방의회 제도 개선 우선 과제(복수응답) |

개선 과제	응답 비율(%)
주민참여 확대(의정 모니터링단 등)	37.9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	36.0
견제 기능 실효성 강화	14.3
전문성 강화	11.8

*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5).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대국민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Ⅲ.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의 정책적 과제

■ 신뢰 회복: 윤리성과 투명성 강화

- 지방의원 겸직과 영리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한 및 징계 기준 세분화를 통해 의회 내 자정(自淨)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의정활동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이 지방의회의 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외부 윤리심사기구 설치 등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 역량 강화: 전문성과 입법 품질 제고

-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운영 내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의원 맞춤형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대학·연구소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자율성과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예산·재정 심의와 행정사무조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함

■ 주민 소통: 참여 확대와 생활밀착형 의정 실현

- 의정 모니터링단,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청원 및 공청회 운영 방식을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여야 함
- 지역의 생활 현안에 밀착한 조례 입법을 확대하여 지방의회가 주민의 일상과 지역 현안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함
- 지방의회 홍보 강화를 통해 주민의 인지도와 관심을 높이고, SNS·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상시적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대표성 제고: 다양한 주민 목소리 반영

- 여성·청년 후보 공천 의무화 및 비례대표제 보완을 통해 지방의회 구성의 성별·세대별 대표성과 균형성을 강화하여야 함
-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의정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포용적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함

〈표 3〉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 4대 실천과제

실천과제	주요 내용
신뢰 회복	윤리강령 실질화, 겸직·영리 행위 엄격 제한,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역량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활성화, 의원 역량교육 체계화, 사무기구 자율성 확보
주민 소통	의정 모니터링단 운영, 생활형 입법 확대,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대표성 제고	여성·청년 공천 의무화, 비례대표제 보완, 사회적 약자 의정 참여 지원



V. 나아가며

- 제9회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의회의 의석 교체를 넘어,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함
- 주민 신뢰 회복, 전문역량 강화, 주민 소통 확대, 대표성 제고라는 4대 과제는 상호 연계된 복합적인 개혁 과제로서, 의회 스스로의 개혁 의지와 실천 노력에 더해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질 때 실현할 수 있음
- 특히 통합특별시의회 등 새로운 유형의 지방의회가 등장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지방의회는 법적·제도적 자율성 확보에 앞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표성과 책임성을 충실히 구현하여야 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이자 주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변화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지원을 이어갈 것임

참고문헌

- 김건위·주희진. (2025).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대국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홍준형. (2026). 통합특별시의회의 규범적 의미와 향후 발전 방향. 「지방의정브리프」, 제49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